

국회에서 피켓·고성 사라지나

여야 '신사협정' 합의... 내년 총선 앞 '정쟁 자제' 한 뜻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의 최소화를 위한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에서의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정쟁에 대한 민심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윤재욱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정쟁 자제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께 국회가 불협사운 모습을 보이고 여

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자들과 만나 "(회의장 내 손 피켓 부착하지 않기와 고성·야유 금지)는 홍 원내대표가 직접 국회의장한테 제안한 내용"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구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 간의 합의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이뤄질 윤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여야는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을 향해 고성·야유를 되풀이하면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벌여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는 일도 있었다.

이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의힘이 정쟁 구호의 현수막을 철거한 데 이어 민주당도 "정책형 문구 위주로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이뤄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마이크가 켜지지 않자 같은 당 정성호(맨 왼쪽), 윤후덕 의원이 도와주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다음달 9일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를 제출할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대야가 필요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육군 장비 고장 4년간 1180건 수리비 107억"

송갑석 "종합정비장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육군 종합정비장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장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육군 종합정비장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자,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장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장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정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 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A/S)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송갑석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 등 종합정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과기원 평의회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민형배 "학교 발전계획 수립 차질"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평의회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24일 G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에 명시된 평의회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 평의회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회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회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회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회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회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면서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회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가보안시설 '한국가스공사' 보안 취약"

양향자 "외부인 무단 침입"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시설'인 한국가스공사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한국의회광주서구을)는 24일 "가스공사가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보호지역의 출입 기록을 매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본사와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의 모든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 본사,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는 각각 국가보안시설 나급, 가급, 다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의 기관장은 보호지역 출입 현



황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본사를 비롯해 기지·지역 본부 모두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차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 기록 보존을 요구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 안보 시설이다. 그런데 이 시설이 '자동문'처럼 뚫리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기지의 심장부인 중앙조정실까지 무단 침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